

## ‘중앙추진단’ 신설 고교학점제 도입 속도 낸다

교육부와 관계기관이 올해 ‘고교학점제중앙추진단’을 신설할 전망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성기선 원장은 신년사에서 “올해는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적극적인 연구사업을 진행하고자 한다”며 “지난 1년간 고교학점제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경험한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전사적으로 지원 체계를 재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에 고교학점제중앙추진단을 마련하고 차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한국교육개발원장,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이 공동단장을 맡아 통합적으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해 눈길을 끌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흥미나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해 이수하고, 누적 학점이 기준을 충족하면 졸업할 수 있는 제도다.

현재 교육과정을 편성·이수하는 기준인 수업 시수(단위)를 단순히 ‘학점’으로 바꾸는 것을 넘어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고 진급·졸업 기준을 정하는 한편, 수강 신청 시스템과 수업·평가 방식을 바꾸는 등 교육 체계 전반을 변화시켜야 한다.

일각에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이 2020년까지 학년별로 적용될 예정인데, 고교학점제 도입과 내신 성취평가제(절대평가제) 도입에 맞춰 2025 개정 교육과정을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이 점을 들어 안정적인 운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25학년도로 전면 도입을 연기했다. 대신 지난해 105곳이었던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를 올해 342곳으로 늘렸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고교학점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교육부와 여러 기관이 함께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논의는 있었다”면서도 “중앙추진단 신설은 검토되고 있는 여러 안 중의 하나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 서울 ‘학교 밖 청소년 수당’ 3월부터 지급

서울시교육청이 야심 차게 내뿜던 ‘학교 밖 청소년 수당’이 오는 3월부터 지급될 전망이다. 학교 밖 청소년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취학을 미뤘거나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 고교를 자퇴했거나 고교에서 제적·퇴학당한 청소년을 말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밖 청소년 수당과 관련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와 아직 협의를 마치지 못했다. 이달 중 협의가 끝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하려면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복지부와 협의해야 한다.

### 재밌는 수학 가르친 교사 10명 수상

경북 칠곡석전중 김희자 교사 등 수학 교사 10명이 학교 현장에서 수학 교육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상을 받았다.

교육부는 한국과학창의재단과 함께 ‘2018 대한민국 수학교육상 시상식’을 열고 학생 중심 수업과 평가 방법 개선 등에 힘쓴 교원을 포상했다. 올해 수상자는 김 교사 등 10명이다. 김 교사는 수학에 인성 교육을 접목한 프로젝트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협력하면서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점을 인정받아 수상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2018 수학용어 말하기 한마당(MATH TALK)’ 본선 대회도 열렸다. 중·고교 각 8팀이 누가 더 수학 용어를 쉽고 재미있게 설명하는지 대결을 펼쳤다.

###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첫 졸업생 대입에서 약진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첫 졸업생들이 대학 입시에서 좋은 성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에 따르면 1회 졸업 예정자 75명 가운데 30명이 2019학년도 대입 수시 모집에서 서울대에 합격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복 합격을 포함해 KAIST 28명, 포항공대 33명, GIST 19명, DGIST 11명, UNIST 7명, 일본 나고야공대 1명 등의 합격자도 배출했다. 연세대 44명, 고려대 43명, 성균관대 19명, 한양대 34명 등의 합격자도 나왔다.

이원희 교장은 “대입 결과가 가장 중요한 지표는 아니지만 자율적인 교육과정 운영과 학생들의 창의성을 길러주는 학습법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한 것 같다”고 말했다.

## ‘자사고 폐지’ 서울 대성고 진통 계속

올해부터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된 서울 대성고가 학부모들의 반발로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대성고학부모회(학부모회)는 서울시교육청과 학교 측이 제안한 ‘일반고 전환 협의체’ 참여 거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일반고로 전환했던 서울 미림여고의 경우 교육청 실·국장, 예산담당관, 학교법인 이사, 교장 등이 참여했지만 대성고 협의체에는 장학사, 학교법인 직원, 일반고 전환을 지지한 교사 등으로 구성됐다. 결재권·결정권도 없는 가짜 기구”라며 거부 이유를 밝혔다.

이어 지난해 자사고 지정 취소 이후부터 벌였던 등록금 납부 거부 운동을 지속하겠다는 뜻도 알렸다. 학부모회에 따르면 현재 고 1·2 학생 600여 명 가운데 200~300여 명이 지난해 9월 자사고 지정취소 이후 3분기(200여 명 미납)·4분기(300여 명 미납) 등록금을 내지 않았다.

한편 올해 자사고 재지정 평가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평가 대상 자사고 중 상당수가 일반고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대성고와 같은 갈등 사례가 확산될 전망이다. @

정리 정나래 기자 lena@naeil.com